

□ 정부시책 □

## 산업자원부, R&D 투자 많은 기업 세제 공제 확대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인력 배분 효율화를 위해 매출액대비 R&D(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업체 등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효율화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재정경제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수급 효율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5%, 중소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해 우수인력의 유인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동일법인체 내 전직금지제도 폐지,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 기간제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공계 대학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대다수의 현장지향적인 기술교육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는 한편 이학대 공학비중이 1:4가 되도록 조정하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실태조사를 주기로 실시하고 연구원의 이원경력제도 도입으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능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계 인력 수요와 기술인력 공급상의 괴리로 인해 '99~2003년 기간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산업기술인력 8만4천여명이 산업계 수요에 대비해 초과공급될 전망이다.

또 공학계 전공자도 같은 기간중 전공별·학력별로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는데 박사의 경우 2001년부터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급부족이, 학사 및 석사는 전기·전자·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금속·재료, 식품·유전 등은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 산업자원부, 수입선다변화 품목 일부 해제

산업자원부는 금년 6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40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하면서 '98. 12월에 32개 품목을 '99. 6월에 16개 품목을 각각 해제하겠다고 예시한 데 따라 48개 가운데 32개 품목을 해제, 31일부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해제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동안 다변화의 보호막 속에 안주해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히 해왔던 국내 업체들간 경쟁을 유발하여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일본이 각종의 경로를 통하여 강력하게 제기하여 온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의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결실들을 제거하여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진전이 기대되는 한편, WTO 규범에 불합치한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 및 가계부문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되는 품목들의 대일수입도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산업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품목의 경우 대일수입의 급증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정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 해제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기관련 품목으로는 압축 점화식의 피스톤식·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8502.12.0000), 기타의 수직식 전동공구(8508.80.0000), 자동차단기(8536.20.0000) 등으로 완전 해제됐다.

## 산업자원부, 국가의 표준제도 기본법 제정

산업자원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가 설치, 외국과의 상호인정체결 추진, 측정분야의 선진화, 품질 및 환경경

영시스템인증 등의 국제화 작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본법안에 의해 정부는 국가표준 심의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제도를 총괄조정,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국제기준 부합도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적합성 평가체제 구축,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진제도와 국제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그간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CE마크 등 별도의 인증서를 받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

을 소비하면서 별도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과 개별부처에서 중복 관리하고 있는 인정, 인증업무의 일관성 및 총괄관리를 통해 인력, 장비, 예산의 대폭 절감, 국제적 기준에 의거 인정받은 전문기관의 육성으로 국제적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가능, 인정·인증제도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협력을 신속히 체결하여 선진국이 설정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수출향상에 기여, 첨단측정기술의 확보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등 국내 기술경쟁력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 중소기업청,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 정비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98. 12. 30일자로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지정의미나 실효성이 없어진 12개 업종과 250개 품목을 해제하였다. 이들은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모기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에는 불필요한 부담만 주고 있어 중소기업계가 해제를 요청해 온 품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과 특히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품목 35개를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계열화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로써 '98년도 지정계열화 업종과 품목은 현행 36개, 1,053개에서 24개, 838개로 각각 조정되었다.

계열화 제도는 모기업체의 최종 완제품 생산

에 필요한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 등의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품목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산화촉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분업화가 바람직한 품목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제도로서 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는 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계열화 제도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계획생산과 경영안정을 돕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정계열화 업종과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열화를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에게는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기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명	업종 및 품목 조정 내역
변 압 기	□ 존치 : 9개 품목 밸브, 브리자, 1차붓싱, 2차붓싱, 2차붓싱(금구), 탭절환, 절환기핸들, 터미널, 후렌지
전 동 공 구	□ 존치 : 8개 품목 고정축전기(칩형 및 탄탈륨전해 축전기 제외), 브러쉬킵, 러쉬홀더, 스위치, 외함, 지석, 카본브러쉬, 프러그부착코
발전기 및 전동기	□ 존치 : 8개 품목 (유도전동기) 단자류, 단자박스, 브라켓, 외함, 환풍기, 환풍기카바 (발전기) 계기류, 릴레이
전자개폐장치 및 보호장치	□ 존치 : 26개 품목 (전자개폐기) 고정부, 단자판, 동작부, 보빈, 보조프레임, 분말야금, 스프크로스바, 홀더 (차단기) 고정부, 기판, 동작부, 디스틴트휠, 레버, 보빈, 분말야금, 붓손잡이, 아크상, 외함, 접촉판, 지지대, 축, 커버, 크로스바

품 목 명	업종 및 품목 조정 내역
가정용전열기구류	◎ 업종 및 품목을 함께 삭제 □ 삭제 : 10개 품목 고무박킹, 몰드 및 사출물, 목체 및 뚜껑, 스위치, 애자, 열판, 온도조절기, 코드붓싱, 프레스물, 히타류
적 산 전 력 계	◎ 업종 및 품목을 함께 삭제 □ 삭제 : 8개 품목 단자브릭, 상보석, 송차, 유리카바, 유리카바밴드, 전류코압코일, 하보석
전동력응용기계류	◎ 업종 및 품목을 함께 삭제 □ 삭제 : 26개 품목 가스켓, 고무자석, 고무제품, 모터(SHADED POLE 모터에 한함), 몰드류, 변압기, 소켓, 스위치, 아답터, 앞판, 오일테어링, 유리, 인쇄 회로기판(SMT연성기판과 양면기판 제외), 정류자, 증발기, 카본브러쉬, 감기어, 컵, 컵박킹, 코넥터, 타이머, 퓨즈, 퓨즈집, 합성수지성형물, 호스, 히터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마크 획득 지원

중소기업들에 해외인증마크 획득 비용을 최고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99년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L/C 개설 등 수출 준비를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전의 용자형태의 지원이 아닌 무담보이며 정부가 소요비용의 70%까지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30%는 주관 기업에서 부담해 청산한 7개 시험연구원 등 111개 지원기관의 전문컨설턴트를 활용, 인증 신청에서부터 제품시험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인증절차를 대행시킬 수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하반기 25억원을 투입, 380

개 중소기업이 미국의 UL, 유럽의 CE, 중국의 CCIB 등 해외유명규격 인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왔다.

'99년 1월부터는 CE마크의 새로운 규격인 MED(선급, 해양설비분야 지침)의 발효로 유

럽으로 수출하는 조선기자재부품은 이 마크를 반드시 따라 하는 등 수출시 해외인증규격 요구가 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업체들은 '99년 1분기내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